

2025학년도 11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주요 문항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해설

5. [출제요소] 전형적인 정부 형태

t시기부터 t+3시기는 모두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이때, 제시된 시기 중 정부 형태가 한 번 변화하였으므로, t시기와 t+3시기의 정부 형태가 다를 수 있다.

한편, t시기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며,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한다.

[해설] ① t시기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B당이라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아니므로, t시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부 형태가 1회 변경되었으므로, t+3시기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하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B당이 아닌 C당이 되어야 한다.

② t+3시기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경직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라면, t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로 확정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t시기의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을 때, 해당 정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된다.

이때, t시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므로, t시기 제1당 또한 A당이여야만 한다.

③ t시기와 달리 t+1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는 것은, t시기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t+1시기부터는 계속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t+3시기에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 인물이다.

④ t시기와 t+2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할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t+1시기에 정부 형태가 변화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t+2시기 초에 다시 정부 형태가 변화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부 형태 변화 수와 모순된다.

따라서 t시기부터 t+2시기까지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며, t+3시기에 정부 형태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t+1시기에는 직전 시기 대비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변화하였으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이 아닌데, 의회 제1당은 A당이므로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확정된다. 따라서 t+3시기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C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t+1시기와 t+3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선지 (4번) 해설에 따라 t+1시기부터 t+3시기까지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다. 한편, ④의 논리에 따라 t+1시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확정되므로, t시기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t시기의 의회 제1당은 A당이 되므로, t시기와 t+1시기의 정부 형태는 동일할 수 있다.

6. [출제요소] 지방 자치의 종합적 이해

A는 행정 사무의 총괄을 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 의회이다.

[해설] ①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 감사 제도이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법률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없다. (지방 의회가 제·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하고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지방 의회는 조례가 아닌 법률의 내용을 개정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상위 법령인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도 없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의원 모두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다만, 선출 방식이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로 다를 뿐이다.) ⑤ 지방 의회와 달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O)

8. [출제요소] 민법의 기본 원칙

1) 계약 공정의 원칙이 아닌 이유

먼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함은, 반사회적 또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없도록(무효로)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취소가 가능한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

2)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닌 이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의사 표시의 합치로 성립된 계약에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때, 사기, 강박, 착오 등의 경우에는 실제 '의사'와 의사의 '표시'가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해도 해당 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해설] 선지 해설 생략

11. [출제요소] 특수 불법 행위 책임

[해설] ① 정의 과실로 인해 갑과 병 간의 계약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갑과 병 간의 계약 관계만 있을 뿐, 정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정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정이 A에게 업무 상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므로, 병은 정의 사용자로서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서 갑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갑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갑은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손해 발생 당시 해당 건물(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을은 공작물의 사용자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④ 갑이 간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갑은 무에게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피용자의 업무 중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갑이 무에게 지는 것은 아니다.

⑤ 무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음료를 배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는 갑과 B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당 계약 관계에서 채무가 없으므로, 무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출제요소] 근로자의 권리 보호

[해설] ①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 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 ② 갑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을 간의 단체 교섭에서, 을이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을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다. ③ 갑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부당 노동 행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갑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본 점에서 동일하다. (O) ④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곧바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결정의 취소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결정과 민사 소송은 독립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14. [출제요소] 계약의 종합적 이해 + 불법 행위

[해설] ㄱ. 갑이 구매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갑의 의사일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의사 표시는 아니다. ㄴ.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없다. (O) ㄷ. 갑이 을이 제시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과는 별개로, 을의 사기로 인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을에 대한 갑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갑과 병 모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이자 감독 의무자인 A는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O)

15. [출제요소] 형사 절차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해설] ① 갑과 을은 서로에 대하여 범인이 아닌 수사 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② 갑의 경우에는 검사가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상황이다. 따라서 형사 법원으로 송치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기소가 필요하므로, 가정 법원 소년부는 갑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을 것이다. ③ 1심 법원은 을의 사기 혐의와 달리 폭행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다만, 위법성 조각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 여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은 충족한 것이다. ④ 갑과 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갑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을은 구속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⑤ 갑은 을의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을의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법원에 상소(항소)할 수 없다. (O)

16. [출제요소] 형법의 이해

(가)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이다.

[해설] ㄱ.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뿐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 또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해당한다.) ㄴ. 제시문에서 '의무적 근로를 부과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보안 처분은 사회봉사 명령이다. 해당 보안 처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범죄 이후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보안 처분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회봉사 명령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ㄷ. 형벌과 보안 처분 모두 집행시에 적법 절차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

17. [출제요소] 가족 관계와 법

[해설] ① 갑은 A에게 혼인의 동의를 받은 시점이 아닌 법률혼을 한 시점에서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 것이다. ② 원칙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을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혼인 전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갑과 을이 이혼한 시점에서 갑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미성년자인 C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그러나 을은 B의 양육권자는 아니지만, B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B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정은 C를 친양자 입양하였다. 이때 친양자 입양과 양자 입양은 모두 입양한 때(친양자 입양에서는 이때가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부터 갑과 정 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될 뿐, 태어난 때로 소급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정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C는 정 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B의 경우 정에게 입양되지 않아 B와 정 간의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B는 정 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20. [출제요소] 선거 결과 자료 분석

1) 현행
현행에서 대통령은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며, 의회 의원은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이때, 각 대통령 후보 자이자 각 정당이 받은 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집단1	200			
집단2		300		
집단3	250			
집단4			250	
합계	450	300	250	0

따라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A당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였으며, 정당 투표 득표율과 의석률이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각 정당의 의석률은 A~D 당 순서대로 각각 45%, 30%, 25%이다.

2) t+1년 시점 개편안 결정
t+1년 시점에는 t시점에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A당에서 당선인을 배출할 수 있는 개편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때, t시점 선호도를 기준으로 한 1안과 2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안>
1차 투표에서 A당은 450표, B당은 300표, C당은 250표를 획득하므로, 과반 득표 한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당과 B당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C당을 투표한 집단의 250표는 2순위 선호를 가지고 있는 B당에게 간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 결과 A당은 450표, B당은 550표를 획득하여, B당에서 당선인이 배출된다. 따라서 t+1년 시점에 <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2안>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추천 투표에 따라 각 정당이 획득한 점수는 A~D당이 각각 450점, 300점, 250점, 0점이며, 비선호 투표로 부여된 감점은 A~D당이 각각 -250점, -200점, -250점, -300점이다. 이를 합하면 A당은 200점, B당은 100점, C당은 0점, D당은 -300점으로, A당에서 당선인이 배출된다. 따라서 t+1년 시점에 <2안>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3) t+4년 시점 선거 결과
t+4년 시점의 선거 결과는 변화된 선호도에 근거하여 <2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1안>에 따른 결과를 도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채택된 <2안>에 따르면 추천 투표에 따라 각 정당이 획득한 점수는 A~D당이 각각 250점, 500점, 0점, 250점이며, 비선호 투표로 부여된 감점은 A~D당이 각각 0점, 0점, -750점, -250점이다. 이를 합하면 A당은 250점, B당은 500점, C당은 -750점, D당은 0점으로, B당에서 당선인이 배출된다.

[해설] ① t시점에 시행된 선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정당인 A당의 의석률이 과반이 아니다. 따라서 t시점에 시행된 선거로 인해 여태야소가 아닌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였다. ② t+1년 시점에 대통령 선거 개편안으로 <2안>이 채택되었다. (○) ③ t+4년 시점에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A당이 아닌 B당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④ <1안>에 따르면 2회의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당선인이 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2등을 하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2안>에 따르면 최종 점수가 음(-)의 값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절대다수 대표제는 아니다.

○ 정치와 법 수험생분들께 드리는 말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의 저자 윤준수입니다.

해설지가 제시되지 않아 많은 분이 학습에 불편을 겪는 듯 하여, 해설지를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시간 사정 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제공해드릴 수 없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벌써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수능이 다가온다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능에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합니다.

과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